

---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

**2020. 3.**

**관계부처 합동**

<b>I. 추진배경</b>	<b>1</b>
<b>II.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기본방향</b>	<b>2</b>
<b>III. 세부 추진방안</b>	<b>3</b>
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1.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3
2.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4
3.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5
나.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6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7
3. 경미한 범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8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9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10
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11
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12
<b>IV.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 구성</b>	<b>13</b>
<b>V. 향후 추진계획</b>	<b>13</b>

## I. 추진배경

- 자동차보험은 2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료 인상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1대당 연평균 보험료(71.5만원), 자동차보험료 소비자물가지수 비중(0.31%)

- '19~'20년중 손해보험사는 사업실적 악화, 정비요금 인상 및 가동연한 상향(60세→65세) 등으로 3차례 보험료를 인상하였으나,
-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문제 등이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 내재요인으로 여전히 작용

- 정부는 그간 자동차사고 피해자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

-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군복무자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소비자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19.7.11.)에서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음

- 또한 공유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차량공유 확산,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운행방식이 출현하고 있으나,

- 현행 자동차보험은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운행을 반영하지 못하여 보장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불합리한 보험제도, 보장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저하될 우려

⇒ 자동차보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기본방향

### 자동차보험의 소비자 권익 제고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방지, 불합리한 보험제도 개선,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

#### 01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①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 ②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 ③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 02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①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 ②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 ③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 ④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 ⑤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 03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 ①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 ②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 Ⅲ. 세부 추진방안

#### 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 ▶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 완화

- (현황)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車사고시 음주운전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중('04.8월~)
  - 자배법시행규칙(§10) 및 보험약관(§11)에 따라 손보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

#####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제도 >

적용 대상	사고부담금(손보사 보상 후 운전자에게 구상)	
	사고유형	금 액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	대인사고(인명피해)	1사고당 300만원
	대물사고(재물파손)	1사고당 100만원

- (문제점) 현행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수준은 경제적 제재 및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 (개선방안) 음주운전자에게 사고시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을 인상하도록 자배법시행규칙(국토부) 및 표준약관(금감원) 개정 추진

\*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도 검토·추진

##### <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강화방안 >

적용 대상		사고부담금	
		현 행	개선(안)*
음주운전 사 고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 사고부담금을 1,000만원, 500만원으로 인상시 보험료 0.4%↓ 인하효과 발생 추정

## 2.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 ▶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ICT 발전을 토대로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 등 이륜차를 활용한 다양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 배달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무리한 운행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가 높은 상황

### < '18년 이륜차보험 손해율 및 평균보험료 현황 >

구 분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가정용·업무용	합계
법인소유	152.5 % / 153만원	64.0 % / 35만원	79.9 % / 18만원	115.6 % / 50만원
개인소유	97.7 % / 82만원	70.9 % / 40만원	67.1 % / 13만원	69.8 % / 17만원
합계	133.4 % / 118만원	69.8 % / 39만원	67.5 % / 14만원	76.6 % / 19만원

- (개선방안)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도입\*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제고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

- 의무보험\* 자기부담금(50만원) 특약 가입시 대인1(약 12%↓) 및 대물(약 18%↓)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전체 약 15%↓)

\* 대인1(1억5천만원) 및 대물(2천만원)

\*\* 단, 동 특약 판매여부 및 구체적 할인율은 회사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3.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 음주·뺑소니 사고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시에는 면책규정無
  - 음주·뺑소니 운전의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면책할 필요
- (개선방안)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해서도 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면책규정 도입
  - 단, 피해자가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 보험사 보상 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 면책금액의 상한\*을 설정하여 저소득·저연령 가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

\* (예시) 대인 손해액 최대 1억원, 대물 손해액 최대 5천만원까지 면책

< 현 행 >				
구분	대인Ⅰ	대인Ⅱ	대물 (의무)	대물 (임의)
음주	보상*		보상*	
무면허	보상*	면책	보상*	면책
뺑소니	보상*		보상*	



< 개 선 >				
구분	대인Ⅰ	대인Ⅱ	대물 (의무)	대물 (임의)
음주	보상*	면책	보상*	면책
무면허				
뺑소니				

\* 사고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면책시 보험료 0.4%↓ 인하효과 발생 추정

##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 ▶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16.9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을 신설하여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 초과시, 단계별 초과비율(4단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재 적용중인 요율 수준으로는 고가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이 저가차량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에 곤란

\* '17.7월 ~ '18.6월 일반차량 손해율(78.0%), 고가수리비 차량 손해율(91.1%)

### < 현행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 >

평균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	120% 이하	120% ~ 130%	130% ~ 140%	140% ~ 150%	150% 초과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	3%	7%	11%	15%

□ (개선방안) 최근 손해율 추이를 반영하여 고가수리비 자동차 150% 초과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 추진

### <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 신설안 >

평균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	150% 이하	150% ~ 200%	200% ~ 250%	250% ~ 300%	300% 초과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현행과 같음	15%	18%	21%	23%

- 아울러,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사고의 심도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하여 고가 수리비 발생시 차년도 보험료 할증폭 확대 검토

### < 자차보험료 할증기준 개선 (예시) >

구 분		현 행	개선(안)
자기차량 손해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건당 1점	손해액 1억원 초과 건당 2점
			손해액 1억원 이하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건당 0.5점	



##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 ▶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군인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이 불합리하여 과소 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

- (군인)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익액 산정시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

\*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19.7.11.)에서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고려'할 것을 권고

- (임플란트) 교통사고로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보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가능성 존재\*

\* 약관상 치아보철비의 경우 금니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규정

□ (개선방안) 표준약관의 군인·임플란트 등에 대한 배상기준 개선

- (군인) 현역병·군미필자의 군복무(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 개선
- (임플란트)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

### < 표준약관 개선 (예시) >

구분	현 행	개선(안)
군인	<사망> 3. 상실수익액 <신설>	<사망> 3. 상실수익액 마. 군복무(예정)자의 잔여 복무기간 중 예상되는 급여소득(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음)을 상실수익액으로 인정
임플 란트	<부상> 1. 적극손해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 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 는 비용.	<부상> 1. 적극손해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 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 에 소요되는 비용.

###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 ▶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의 경우 보험료 할증 제외

□ (현황)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중

-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매년 운전자별 세부 법규위반여부를 제공받아, 이를 그룹으로 묶어 손보사에 제공

#### < 경찰청 법규위반코드 (예시) >

경찰청 →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 손보사	
적성검사 · 수시적성검사 미필	307**	기타 행정처분 (총 23개 세부코드)	B161
즉결심판불응	214**		
.....			
미등록차량 운전	312**		
자동차이용 범죄행위	313**		

□ (문제점) '기타 행정처분' 법규위반의 경우 '적성검사 미필', '자동차이용범죄' 등 23개의 세부구분\*이 동일한 그룹으로 구성

\* 자동차이용범죄, 즉결심판불응, 차량절취, 면허대여, 약물복용 운전 등

- 이에 따라, '적성검사 미필'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이용범죄' 등과 동일하게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기타 행정처분' 정보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 등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

#### < '기타 행정처분' 법규위반 할증률 개선안 (예시) >

경찰청 법규위반코드		현 행	개선안
적성검사 · 수시적성검사 미필	307**	최대 24.3%*	0%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범칙금미납)	214**		
적성검사 불합격(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317**		
연습면허 교통사고 야기	332**		

\* 현행 할증률은 보험사별로 상이

####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단기요율\*을 적용하나, 신규차량을 추가하여 동일증권\*\*으로 가입시 일할보험료를 적용

\* 단기요율 : 단기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요율

\*\* 2대 이상 차량의 보험만기를 일치시켜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

- 단기요율을 적용받는 차량 1대 소유자에 비해 다수차량 보유자가 적용받는 보험료가 낮아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

##### < 동일증권 가입시 일할요율·단기요율 보험료 차이(예시) >

보험기간		보험료	
보유차	1년	60만원	
		일할요율 적용시	단기요율 적용시
신차 (동일증권 가입)	60일	10만원 ( $\approx 60 \times \frac{60}{365}$ )	12만원 ( $60 \times 20\%$ )

- 또한 단기요율 적용시 구간이 월단위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

\* 45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2월 단위의 단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

- (개선방안)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 제고

##### < 단기요율 세분화 >

현 행									
보험기간	7일까지	15일까지	1월까지	2월까지	3월까지	4월까지	5월까지		
단기요율	6%	10%	15%	20%	30%	40%	50%		
보험기간	6월까지	7월까지	8월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11월까지	12월까지		
단기요율	60%	70%	80%	85%	90%	95%	100%		
변 경									
보험기간	7일까지	15일까지	1월까지	45일까지	2월까지	75일까지	3월까지	105일까지	4월까지
단기요율	6%	10%	15%	18%	20%	25%	30%	35%	40%
보험기간	135일까지	5월까지	6월까지	7월까지	8월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11월까지	12월까지
단기요율	45%	50%	60%	70%	80%	85%	90%	95%	100%

##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평원이 심사하며, 세부기준 부재시에는 사례별로 심사 중

○ 사례별 심사과정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심사결과 불일치 등 분쟁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일관된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 건강보험은 진료수가 기준상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심평원이 별도의 심사기준 마련 가능(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처리기준)

□ (개선방안)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20.5 시행)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계, 의료단체, 보험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 예정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현 행	개 선
제23조(진료수가의 심사) <u>&lt;신 설&gt;</u>	제23조(진료수가의 심사) ② 심평원은 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u>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③ 심평원장은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u>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이후의 진료분부터 심사에 적용한다.</u>

## 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 ▶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보장사각지대를 예방

- (현황 및 문제점) 유상카풀의 허용 시간\* 등을 명확히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시행

\* (출근) 오전 7시 ~ 오전 9시, (퇴근) 오후 6시 ~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19.8.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동 법 시행으로 출퇴근시 유상카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관의 유상운송 면책기준으로 보장사각지대 발생 우려\*

\*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不可로 규정 → 카풀 운행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 (개선방안)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단, 카풀을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고려하여, 추후 통계적으로 카풀의 위험률 차이가 입증될 경우 별도 특약으로 분리 추진

###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시) >

현 행	개선(안)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u>&lt;신 설&gt;</u>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승용차함께 타기는 보상합니다.

## 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기준 등을 마련 중으로, 자율차 사고시 보험제도 및 보험상품개발 필요

- 특히 Lev3. 자율차의 경우 자율주행과 수동주행이 혼용됨에 따라 사고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으로 피해자 구제 지연 우려

□ (개선방안) 자율차 사고시 운행자책임이 적용되도록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개정(20.3.6. 국회 본회의 통과) 및 후속조치\* 추진

\*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부착의무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

- 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의 운행자책임 원칙 적용(국제 추세)
- ② 자율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근거 마련
- ③ 제작사 등의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부착 의무
- ④ 자율차 사고의 전수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아울러,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추이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 추진

### < 자동차보험 보험상품 체계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업무용		업무용
	영업용		영업용
(신설)	(신설)	자율주행차보험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 Ⅳ.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
  - (구성) 자동차보험 관련부처(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 부기관장급 또는 국장급이 참석하며, 사안별로 관계부처를 추가
  - (운영) 매반기별로 정례회의,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Ⅴ.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조치사항	완료시한	소 관
<b>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b>			
1. 음주운전자 자동차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자배법령 개정	'20.하반기	국토부, 금융위·금감원
2.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상품개발	'20.하반기	손보험회
3.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면책 도입	표준약관 개정	'20.상반기	금융위·금감원
<b>나.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b>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참조요율서 개정	'20.상반기	보험개발원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표준약관 개정	'20.상반기	금융위·금감원
3. 경미한 범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참조요율서 개정	'20.상반기	보험개발원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참조요율서 개정	'20.상반기	보험개발원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자배법령 개정 등	'20.상반기	국토부, 심평원
<b>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b>			
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표준약관 개정	'20.상반기	금융위·금감원
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자배법령 개정	'20.하반기	국토부, 금융위·금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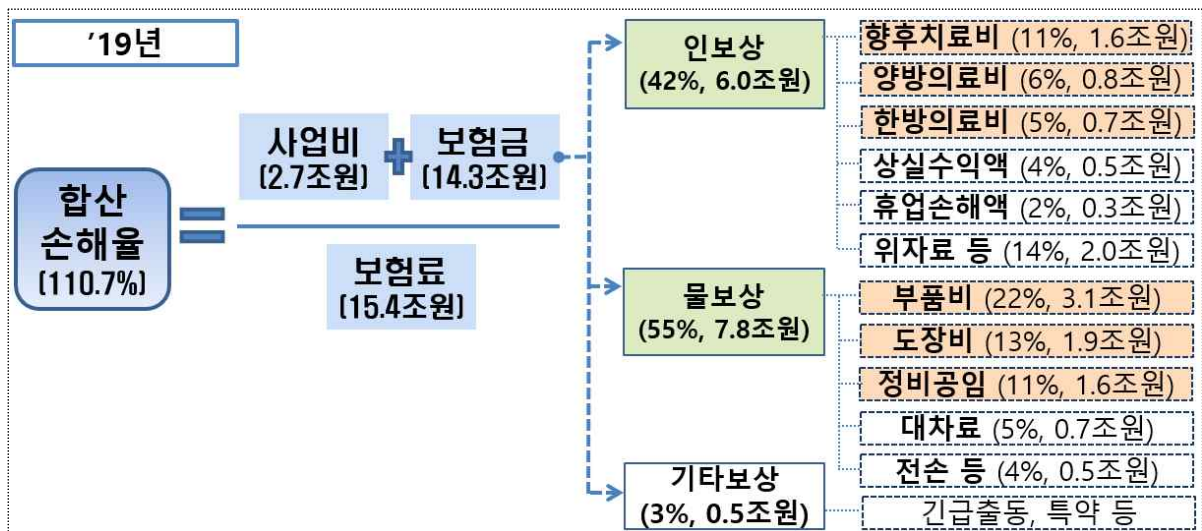


## 참 고

## 자동차 보험금 구성 및 증가율 분석

- (보험금 구성) '19년 자동차보험금 인적보상 중 향후치료비(1.6조원, 11%), 양방의료비(0.8조원, 6%), 한방의료비(0.7조원, 5%)가 큰 비중을 차지
- 물적보상에서는 부품비(3.1조원, 22%), 도장비(1.9조원, 13%), 정비공임(1.6조원, 11%)이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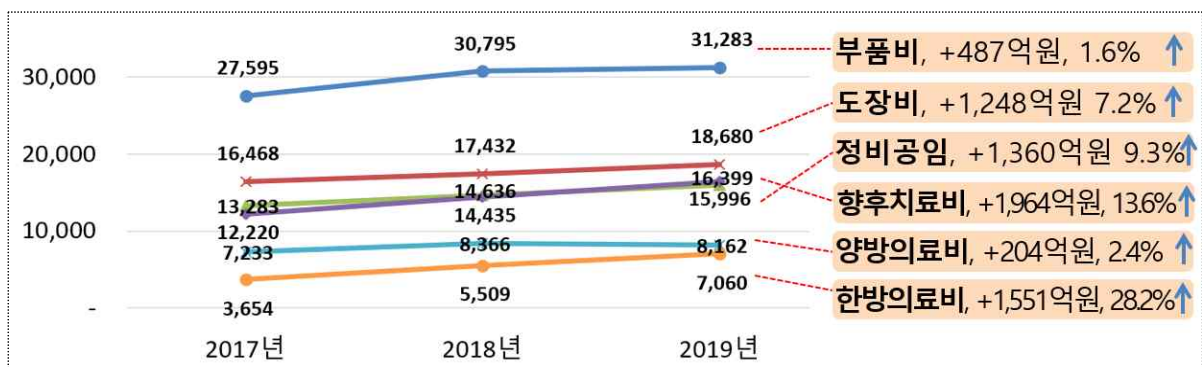
### < 자동차보험금 주요 구성항목 >



- (주요 항목별 보험금 증가율) '17~19년중 인보상 보험금은 연평균 9.1%(+4,683억원), 물보상 보험금은 7.7%(+5,388억원) 증가
- 인보상에서는 향후치료비(+2,090억원, 15.9% ↑), 양방의료비(+465억원, 6.6% ↑), 한방의료비(+1,703억원, 39.5% ↑)가 크게 증가하였고,
- 물보상에서는 부품비(+1,844억원, 6.6% ↑), 도장비(+1,106억원, 6.5% ↑), 정비공임(+1,356억원, 9.7% ↑)이 크게 증가

### < 최근 2년간 주요 담보 보험금 추이 >

(단위 : 억원)







##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 ☑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 ☑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 ☑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 보험료·보험금은 합리적으로

- ☑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 ☑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 ☑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 ☑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 ☑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 ☑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